

광주 하계 U대회 선수촌 염주 주공단지에서 재건축

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연내 제정 추진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최 기간 1만2천여명의 선수촌이 머물 대단위 선수촌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 염주 주공아파트 단지에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U대회 준비·개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대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게 될 특별법은 연내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제정될 전망이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시장은 “이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재개발 수요가 높아 선수촌을 건립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2안으로는 환경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1만이 선수촌 건립에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수촌 건립 부지로 고려되고 있는 염주 주공단지에는 현재 1천1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선수촌 건립에 대한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시는 이 부지에 25층 규모의 선수촌을 건립, 1만2천여명의 선수단을 수용할 방침이다. 개발 방식으로는 민간투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U대회 폐회시 일반에 분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선수촌은 대회 개최 1년전인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U대회 본격 준비를 위해 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뒤 오는 2011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최장 8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적은 의원입법 방식을 택하며,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연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초 법국민적인 조적위원회 구성하고 실무 전담기구를 꾸린 뒤 2011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6년여 기간 동안 경기장시설과 선수촌, 교통문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PSI 전면 참여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D)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5면>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

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

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 유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또 야당들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연합사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로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의 목표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와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이른바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대비용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6000

‘노무현 서거’ 무엇을 남겼나

1 원칙과 균형

탈권위·지역균형 ‘미완의 과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특권과 지역주의에 맞서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보 같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미완의 도전’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겪은 ‘도전과 좌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지 재조명한다.

빈곤·소외 등 비주류의 대변자로 원칙과 현실 충돌 사회적 갈등도

▶관련기사 2·3·4·7면

“한 마디로 무모함을 넘어 바보스러울 정도로 원칙적인 분이었습니다.”
지난 2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만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그를 ‘원칙에 충실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던 사람’으로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그의 정치 역정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빈곤의 아들 태어나 상고 출신의 인권변호사, 6월 항쟁 민주투사, 5공 청문회 스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노 전 대통령은 90년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한 뒤 ‘꼬마 민주당’에 잔류, 스스로 가시발길을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또 하나의 정치적 이념은 ‘균형’이다. 기형적인 성장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온 수도권과, 소외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의 저울 추를 바로 잡으려는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공기업의 지방으로 분산하는 혁신도시, 국가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표적인 균형발전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에 따른 부의 과도한 편중현상을 시정

하려 했고, 진보적인 사고에 무게를 더으로써 군사정권 시절부터 형성된 우(右) 편향의 사회의식도 균형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은 현실과 크게 달랐다. 5년동안에 수십 년동안 사회 구석 구석에 쌓인 부조리를 청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임기 동안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각종 논란이 피리를 뿜었다. ▲대북송금 특검 ▲열린우리당 창당 ▲개인인 발언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추진 등 주요 이슈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조금만 양보했다더라도 탄핵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주류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원칙주의적 접근과 직설적 언행은 보수진영의 공세를 불러와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원칙과 균형을 발판으로 출발한 노 전 대통령의 개혁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한 채 추동력 부족으로 두터운 ‘관행’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칙이 통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도전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짱님 사랑합니다” 촛불 애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6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시민합동분향소에는 밤늦게까지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추모의 글을 적은 노란색 리본을 걸고, 촛불로 ‘노짱님 사랑합니다’라는 글귀를 만드는 등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